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더뎠다…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한국개발연구원, 7월 경제동향
광공업·반도체 생산 증가세 불구
자동차·전기장비 등 감소세 확대
수출 조업일수 일평균 12.4% 증가

내수 회복이 더딘 탓에 수출 증가에도 불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고금리 기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최근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5월 전(全)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2% 증가)은 연초에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의 한 상점에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 등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경기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생산 호조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

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5.1%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12.4%로 전월과 비교해 높았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 판매(-3.1%)는 승용차(-9.2%), 의복(-6.8%), 음식료품(-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된 반면,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설비투자(-5.1%)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건설기성(-3.8%)은 착공면적 감소세가 반영돼 건축 부문의 둔화 흐름이 계속됐다. KDI는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단시일 안에 건설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고 설명했다.

5월 취업자는 8만 명으로, 서비스업 둔화 흐름에 더해 건설업도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조정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농산물(13.3%) 가격의 오름 폭이 전월(19.0%)에 비해 둔화했다. KDI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근원 물가 상승세(2.2%)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5월 주택매매시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됐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또 줄었다

고용노동부, 상시가입자 1.5% 증가
고용허가 외국인 제외엔 6000명 ↓
제조업 가입자 384.9만명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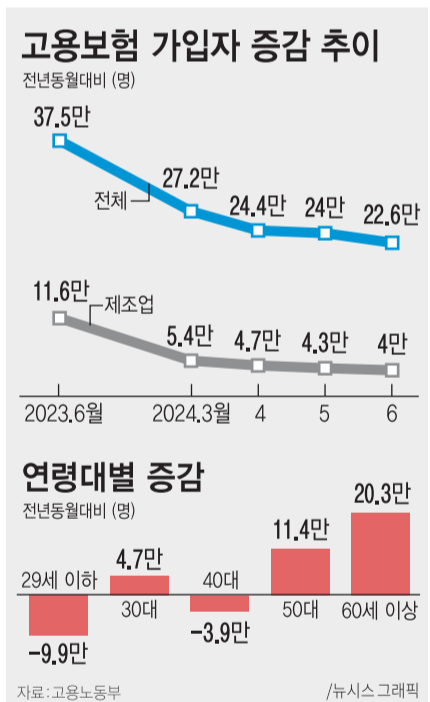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허가 외국인을 제외하면 6000명 줄었고, 특히 건설업은 11개월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뚜렷하다. 30대와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22개월째,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만 6000명(1.6%)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엔 2021년 2월(19만 2000명) 이후 40개월 만에 최소다. 올해 들어선 1월 34만 1000명 증가에서 지난달 22만 6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업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1.1%)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60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증가한 23만 6000명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도입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체 신규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36.9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달 23.0%까지 낮아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64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000명(1.8%) 늘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운수창고 등은 증가를 지속했고 숙박음식업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3%) 줄었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4만 7000명), 50대(11만 4000명), 60세 이상(20만 3000명)은 증가했지만, 29세 이하(-9만 9000명)와 40대(-3만 9000명)는 감소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봤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0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회복기인 2021년 4월 이후로는 지금 38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인구 요인과 특정 산업 요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4.0%) 감소한 8만 4000명이다.

/세종=한윤수 기자 hys@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
연속 근무시간 상한 24시간으로
주당 근무 80시간→40시간 축소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근무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자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작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시작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네트워크 수련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24시간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육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공의가 삼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의료, 일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뉴스1 selee@

시민단체 “제대로 된 규제법, 산업 활성화”

>> 1번 ‘온플법 2라운드...’서 계속

그는 “배달앱에 수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

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배달 앱 기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혁신 성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seoh@